

# “보조금 받아놓고… 국내 복귀기업 66% 사업 시작도 안해”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 세액공제와 투자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는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들 기업 중 66%는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3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 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각국은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양향자 의원 산업부 자료**  
리쇼어링 정책으로 121곳 보조금 지원 80개사 조업 미개시·매출 확인 불가 조업 차일피일… 8년간 준비중인 곳도 실태조사 미흡 등 관리·감독 부실 지적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사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 /손진영 기자 son@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돼 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한다.

하지만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사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돼 지급된 전체 투자보조금 1721억원 가운데 63%인 1079억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사는 2020년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돼 124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 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 “해외판 ‘부모 찬스’ 우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증여세 회피 가능성 면밀히 살펴야 국세청 관리감독 강 건너 불구경



해당자료는전체다발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했다. 한국은행은무분별한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송금되는 금액이 25조1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5조 원 규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당발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25조1847억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자금규모는 2017년 4조9323억원, 2018년 5조1065억원, 2019년 4조5933억원, 2020년 3조8410억원, 2021년 4조8103억원 등이다. 올 상반기(1월~6월)에는 1조9012억원이 증여성 해외로 송금됐다.

건수로는 2017년 44만8774건, 2018년 38만7250건, 2019년 56만390건, 2020년 51만8166건, 2021년 53만5577건, 2022년(1~6월) 23만7316건이다.

유동수 의원은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보아야 한다”며 “고액 자산을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경우 1년 5만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단, 연간 동일인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금액의 합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1만달러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회피는 성실납세자가 대부분인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증여성 거래에 대해서 더욱 까다롭게 검토해 회피를 미리 방지하고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강하게 처벌 및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최근 5년간 증여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송금 규모가 25조1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피해액 대폭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범죄 9.2% 감소, 피해액 92% 증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줄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는 해당 기간 3만4132건(2018년)에서 3만982건으로 9.2% 감소했고 검거 인원은 3만7624명에서 2만6397명으로 29.8% 줄었으나 피해액은 4040억원에서 7744억원으로 91.6% 증가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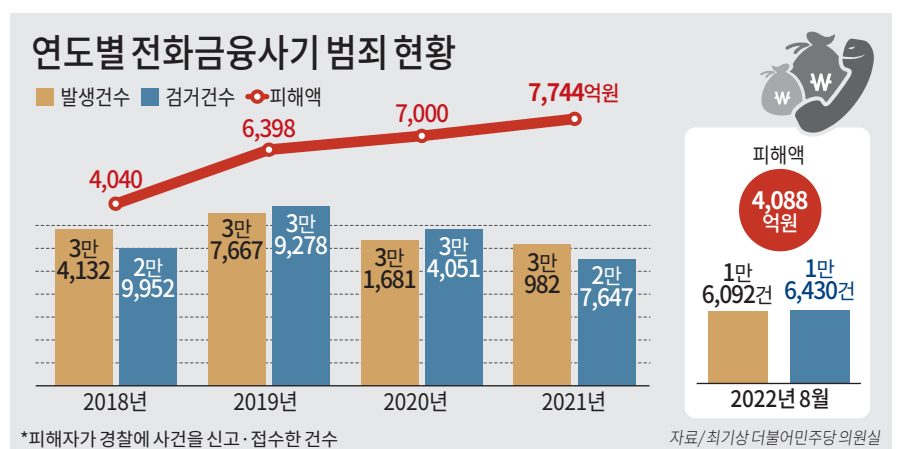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약 20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화플랫폼을 구축해 피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포함돼 있지 않아 대응센터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시기도 최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 피해 신고·상담 접수창구 일원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해당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절차다.

최 의원은 센터 내 인력 수급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용계약상 근무지가 달라 상담원의 대응센터 파견은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파견 예정 인력 4명 중 2명만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협이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센터 내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는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개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큰 난항이 예상된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

응한다지만, 말만 앞선 채 정책 범죄 대응 실무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가 포함하지 않은 ISP 예산은 국회가 살리더라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